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대규모 행정명령 예상 일본은행 금리인상 여부도 관심
 - IMF,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소폭 상향. 트럼프 관세 등은 위험 요인
 - 미국 재무장관, 정부부채 한도 도달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1/21일부터 시행
 - ECB 슈나벨 이사, 금리인하 여력 확보 예상. 다만 추가 인하에는 신중할 필요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트럼프 정책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상승[+2.9%],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1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4/4분기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양호한 중국 4/4분기 성장률 등으로 2.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요 물가 지표의 예상치 하회 등을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92% 하락, 한국 CDS 하락

		1/17일	1/10일	전주말대비			1/17일	1/1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996.7	5,827.0	+2.91%	국채 금리 10y	미국	4.63%	4.76%	-13bp
	유럽	523.62	511.50	+2.37%		독일	2.54%	2.60%	-6bp
	중국	3,241.8	3,168.5	+2.31%		영국	4.66%	4.84%	-18bp
	일본	38,451	39,190	-1.89%		한국	38bp	40bp	-2bp
	한국	2,523.6	2,515.8	+0.31%	CDS 5y	중국	58bp	62bp	-4bp
환율	달러지수	109.35	109.65	-0.28%	위험 지표	EMBI+	360bp	357bp	+3bp
	유로화	1.0273	1.0244	+0.28%		VIX	15.97	19.54	-18.27%
	엔화	156.30	157.73	+0.91%		WTI유	77.88	76.57	+1.71%
	위안화	7.3252	7.3326	+0.10%	원자재	구리	436.9	430.4	+1.50%
	원화	1,458.5	1,472.0	+0.93%		금	2,703.3	2,689.8	+0.5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대규모 행정명령 예상. 일본은행 금리인상 여부도 관심

- 1/20일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그 동안 언급한대로 대규모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에도 취임 즉시 100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취임 첫날부터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전망
- 행정명령은 이민(멕시코 국경강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관세(대외수입청 신설 및 보편 관세 추진을 위한 사전 여건 조성), 에너지(연안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 규제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
- 다만 그 동안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의회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전기차 보조금 폐지, 예산 감축을 위한 일부 부서 폐지)가 다수 존재.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시장에서는 1/23~24일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도 관심. 최근 전문가들은 우에다 총재와 히미노 부총재가 금리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평가(Bloomberg Economics). 닛케이 역시 실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다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시장 불안 및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소폭 상향. 트럼프 관세 등은 위험 요인

-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이전(3.2%) 대비 상향되었으나 코로나 이전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국가별로는 미국(2.2%→2.7%), 중국(4.5%→4.6%)이 상향 조정된 반면 유로존(1.2%→1.0%)은 하향. 트럼프 관세 정책 등은 향후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 재무장관, 정부부채 한도 도달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1/21일부터 시행

- 엘런 장관은 정부부채 한도 도달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2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 비상조치는 특별 회계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 만일 비상조치에도 부채 상한에 도달하면 정부는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다만 공화당의 일부 의원은 방만한 재정지출 가능성으로 부채한도 상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부채한도 폐지 성공 여부는 불투명

■ ECB 슈나벨 이사, 금리인하 여력 확보 예상. 다만 추가 인하에는 신중할 필요

- 슈나벨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금리인하를 위한 여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점차 추가 금리인하가 여전히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이에 추가 인하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

■ 이스라엘-하마스, 6주간의 휴전 발효. 양측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시작

- 1/19일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고, 중재국 카타르의 외무부도 하마스가 인질 3명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고,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서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할 예정

■ 일본은행의 가계 조사, 1년 후 물가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85.7%가 1년 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이는 이전(85.6%)과 비교하여 소폭 늘어난 수치. 한편 1년 후에 인플레이션(연율)은 1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향후 5년 인플레이션(연율)은 평균 9.2% 올라갈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및 마틴루터킹 데이 휴장
- 독일 12월 생산자물가,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취임 직후 역대 최대 수준의 행정명령 예고, TikTok 금지법 유예 포함

- **트럼프, 역대 최대 수준의 행정명령 예고** : NBC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역대 최대 수준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TikTok 금지법 90일 유예, LA 산불 피해 지역 방문 등이 첫 주의 핵심 의제로 제시.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초기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할 전망
- **트럼프, TikTok 금지법 시행 유예** : 금지법 시행으로 TikTok의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트럼프는 취임 직후 90일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50% 지분을 인수하는 합작투자 방안을 제안
 - 존슨 하원의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완전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등은 법 시행 유예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 표명.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 보호 및 저장되는 조건 하에서는 중국 측의 소유권 유지도 가능하다는 의견 피력
- **여론조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해 양극화 심화** : NYT-Ipsos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걱정/비관적' 51%, '가대/낙관적' 47%로 의견이 상이.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에서는 긍정 45%, 부정 39%로 집계. 중국 및 멕시코 관세 부과는 찬성 46%, 반대 50%. 한편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은 80%가 시행 가능성 높다고 전망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추진** :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내 중국 방문 의사를 표명. 양국은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며, 시진핑의 방미 초청도 검토 중

■ [해외시각] 트럼프 관세,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협상용 전략일 가능성도 상당

- **트럼프 관세정책,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보호무역정책의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관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간 625달러의 추가 비용 및 14만개 일자리 감소를 초래(Bloomberg)
- **트럼프의 고율 관세, 협상용 전략일 가능성** :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1기 당시에 협상 전술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실제 인상 규모는 제한적일 전망. 트럼프 측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모색(Reuter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위험 요인이나 재정운용 견제 역할도 내포 - Financial Times

(The bonds markets vs Donald Trump)

-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 이후 1%p 상승. 이는 건조한 경제 성장, 트럼프 관세 강화 전망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매입 축소, 향후 장기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이 원인.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거론
- Bridgewater의 달리오 CEO는 1%대로의 금리인하, 물가상승 용인, 증세, 지출 삭감 등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 시장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치적 역량 보유 여부에는 의문을 제기. 한편 채권금리 상승은 트럼프의 재정규율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

■ '25년 달러화 강세 전망, 고율 관세 후폭풍 등으로 오류 가능성도 내재 - Financial Times

(The consensus on a strong dollar may be too complacent)

- 시장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이는 트럼프 관세 등 정책 의제 대부분이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기 때문. 특히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채권금리 상승과 여타국과의 금리 차 확대에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도 내포.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달러화 약세 전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
- 첫째, 관세 효과는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우호적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 감소 등 경제 악영향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트럼프 1기에서 위안화도 초기 약세 이후 강세로 전환. 둘째, 트럼프 대선 당시 달러화 약세 지지 발언을 이행할 가능성. 셋째, 동맹국과의 안보 신뢰 악화 시, 해당국이 달러화 보유를 축소할 사례가 존재

■ 미국 지역은행, 채권금리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 심화될 우려 - 블룸버그

(Regional Banks Face Headache From Rising Treasury Yields)

- 국채수익률 상승 지속으로 지역은행의 부채 관련 우려가 다시 부각될 소지. 실제로 채권부문 미실현 손실이 3/4분기에 감소했으나 연말에는 반전될 가능성(FDIC). 특히 지역은행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 위험이 증폭될 수 있어 주의 요구
- 현재 3조달러 규모의 CRE 대출 중 14%(사무실 대출은 44%)가 손실 위험에 직면. 아울러, 소규모 대출기관과 지역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CRE 불황 장기화에 따른 재융자 어려움 등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에 취약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